

국정신문

1997년 12월 8일 (월요일)

週刊 / 비매품

國政指標 / 新韓國창조

깨끗한政府 / 튼튼한經濟 / 건강한社會 / 통일된祖國

發行人 吳隣煥 · 編輯人 南廷判 · 發行處 公報處 政府刊行物製作所 / (우) 110-716 서울 종로구 도렴동 60번지 도렴빌딩 / 전화(02)733-5480(대) · 733-5484(편집) FAX 733-5374

超긴축 · 低성장 시대

정부 구조조정 앞당긴다

경제회생을 위한 IMF(국제통화기금)의 긴급수혈이 시작되었다. 정부는 이에따라 지난 3일 'IMF 대기성 차관협정' 체결을 계기로 잇달아 경제대책회의를 열고 후속책 마련에 들어갔다. 정부는 대책회의를 통해 우리경제의 위기상황이 고질적인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서 비롯되었음을 감안, 이를 혁파하는 데에 정부가 솔선수범키로 하고 우선 정부조직 및 인원 감축계획 등을 앞당겨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실업 최소화대책과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돋기 위해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 및 공공부문의 재정긴축운영과 구조조정은 조직 통폐합과 함께 인원을 감축해서 '저비용 고효율'로의 체질개선을 모색하는 민간 경제부문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3일 高建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대책추진위원회를 열고 조직과 인력감축방안을 마련하고 우선 지방행정의 계층구조를 축소하는 방안과 현행 읍·면·동의 기능을 지역단위 생활정보센터 등으로 전환하는데 이어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따라 지역별로 분산설치된 행정기관을 통합 또는 광역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연계성이 큰 기관부터 지방으로 이관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행정 구조축소 추진

중앙정부의 조직개편과 인력도 대폭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당초 2000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던 행정지원인력 1만명 감축계획을 1년 앞당겨 오는 99년까지 매듭짓고 현재 1천5백20명과 1천2백30명에 달하는 공무원 별도정원 및 장기교육 과연인력도 내년 이후부터는 30%이상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조직 및 인력을 전면 동결 조치하기로 했다.

재정긴축을 위해서는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경비라 해도 최대한 절감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해외여비·행사성경

비 등 일반행정경비를 줄이는 등 예산을 대폭 절감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각 부처별로 기구·인원·예산절감 등 강력한 조직개편 및 재정긴축 방안을 마련, 곧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정부의 경제회생 노력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 경제계·근로자·전국민이 한마음이 돼야한다고 보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준 것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구조조정과정에서

조직개편·예산절감 본격착수

대통령 "기업 실업 최소화 대책을"

발생하는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폐업 또는 감원대신 일시휴업 △근로시간 단축 △사회파견 △감원 대신 교육훈련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총 1조2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근로자의 직업전환 및 기업의 업종전환에 따른 인력재배치를 지원하고 집단감원으로 인한 3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채용기업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재취업을 적극 촉진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5일 金泳三대통령 주재로 열린 IMF 후속대책 준비를 위한 경제대책회의에서는 관계부처별로 경제회생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했다.

金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IMF에서 권고하는 통화긴축, 흑자재정 그리고 금융개혁 등은 우리의 국제수지 개선과 물가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당장



청와대 경제대책회의

金泳三대통령은 지난 4일 오전 청와대에서 'IMF후속대책준비'를 위한 경제대책회의'를 주재했다. 金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IMF자금지원을 계기로 우리경제가 어떠한 시련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체질을 갖춰야 할 것"이라며 관계장관들에게 후속대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보고했다.

金대통령은 특히 경제부총리에게는 "최근 일부 금융기관에서 예금인출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모든 예금을 전액 지급보증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홍보하고 동시에 예금자들이 안심하고 평소와 같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IMF와의 협상을 전후해서 이미 각급 사회단체를 비롯, 경제계·노동계·학원가 등 전 국민들 사이에서 자생적으로 경제살리기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리 국민은 지난 30여년간 고도성장과 이른 바 '경제불파 신화'라는 자만감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불어닥친 경제위기 상황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고 진단하고 "그러나 위기일 때마다 강인한 정신력을 발휘, 좌절이나 실망보다 '다시 시작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이를 '국민적 역량의 총체적 결합'이라고 정의하고 이같은 현상이 경제회생의 직접적인 동인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IMF 시대' 조기졸업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4·5面 기획특집

'IMF시대' 우리경제 문답풀이

산업기술인력 수급대책

병역특례·전문연구 요원 자격 中企 학사급으로 확대 방침

병역특례요원에 대한 편입자격이 중소기업에 한해 학사급으로 하향 조정되고,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중소기업의 신청자격도 석사급 연구요원(2명)에서 학사급 연구요원(5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업체·직종별 협회·전문직 단체 등 민간단체에게 특수전문분야 자격제도에 대한 자율적인 창설 및 운영을 허용하고, 현행 국가기술자격 등급도 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술사로 단순화하는 등 산업기술인력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통상산업부는 지난 2일 최근 우리 경제의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산업기술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산업기술인력 수급 효율화대책'을 마련, 내년 1월중 이를 확정, 2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통신부는 우선 이공계 대학의 교육기능을 특성화, 일부대학은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화 대학과 산업체의 수요에 맞는 현장지향적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으로 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학 스스로가 학과 통폐합, 대학간 제휴 및 통합, 교육기능의 차별화 및 지역특성화 등의 구조조정에 나설 경우, 이를 대학평가에 반영하고 세제혜택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이공계 대학정원을 교육여건 및 분야별 인력 수요의 변화 등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수도권 소재 대학 공과대학에 대한 정원 자율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기업, 기술대학 설립 허용

이밖에 이공계 대학생의 산업체나 연구기관에서의 현장실습을 의무화하고 교과 과정에 실험실습을 보강하는 한편 팀 프로젝트 참여기회를 확대, 이공계 대학교의 현장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기업체 혹은 기업체 연합이 학교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기술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총정원 4백명 이하의 공학계열 및 신산업분야 관련 교육기관을 인구집중유발시설에서 제외시켜 소규모 특성화대학으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蔡洙逸기자

우편법시행령중개정령안

고도화된 우편수요의 변화에 부응, 우편사업 관련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우편물의 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우편이용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재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특히 종래 등기우편물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특급우편물을 24시간 이상 지연배달한 때에도 손해를

국무회의 주요의안
(12월2일)

권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간부문이 민자유치사업을 제안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제안된 사업을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여부를 3개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당해 사업이 민자유치사업으로 확정된 경우 사업계획평가시 당해 사업의 제안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회간접채권을 발행할 금융기관은 은행법에 의해 허가받은 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장기신용은행으로 정했다.

특급우편물 배달 하루이상 늦으면 損賠 '민자유치 SOC 건설' 사업 제안자 우대 고령농업인 보조금 60세이상으로 확대

배상토록 했다. 또 우편업무의 위탁을 우편물의 운송·집배업무 및 우표류 조제업무에 한정했던 것을 개선, 우편물 방문접수 업무와 일정한 부가우편 역무 등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우편작업 효율화를 위해 우편물 발송대행자나 우편장비 등을 제조·판매하는 자 및 우편연구기관 등에 대해 기술지원이나 연구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SOC유치 촉진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민간유치 사업 추진과 관련, 민간제안제도를 개선하고, 사회간접자본 채

행 및 장기신용은행으로 정했다.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 지불제도 시행규정증 개정령안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보조금 지급대상 연령을 종래 65세에서 60세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이제까지는 3년간 계속해서 벼를 경작한 농업인의 경우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해 왔으나 앞으로는 3년중 1년이상만 벼를 경작한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토록 했다.

공정한 경쟁, 현명한 선택, 희망찬 미래

‘경제책임 전·현직 고위당국자 조사’

현단계서 관련자 인책 검토한 바 없어

감사원

12월 5일자, 국민

감사원과 검찰이 경제파탄을 초래한 관련기관 전·현직 고위당국자에 대한 직무유기 여부와 외환관리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와 법률검토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李時潤 감사원장은 5일

청와대에서 金泳三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은 특감방침을 보고했다.

李時潤 감사원장은 5일 金泳三 대통령에게 경제실정 관련 공직자들에 대한 직무유기 여부를 특별감사할 것이라는 보고를 한 일이 없으며, 또한 현 단계에서 관련자들을 인책하거나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검토한 바도 없음을 밝혔다.

(공보관실: 7219-401)

‘일서 협조융자 대가 독도문제 제기’

독도거론 어불성설...지원내용만 확인

재정경제원

12월 4일자, 동아

일본 정부는 IMF와 함께 우리나라에 긴급 협조융자하는 대가로 독도문제를 일본에 유리하게 끌고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융자대가로 독도 문제를 거론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지난 달 28일 林昌烈 경제부총리가 자금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 정부는 IMF 협조융자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을 뿐 독도 문제를 거론한 사실은 일체 없었음을 밝힌다.

(공보관실: 503-9020)

國政 안테나

광양항 컨테이너 항만으로 집중 육성

○…우리나라는 수출입 화물의 대부분을 바다를 통해 수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항만시설의 확보는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세계무역경쟁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받쳐주는 중요한 관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광양항 컨테이너 터미널은 최첨단 시설과 종합물류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광활한 배후부지를 갖춘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형 신항만이라는 점에서 그 역할과 기능이 크게 기대됩니다. 앞으로 정부는 광양항의 이점을 잘 살려 광양항을 부산항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양대 컨테이너 항만으로 집중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高建(국무총리, 12월5일 광양항 1단계 컨테이너부두 준공식)

소방인은 화재예방에 최선 다해주길

○…10만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 16만 방화관리자 및 위험물안전관리자는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동절기를 맞아 취약요인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와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曹海寧(내무부장관, 12월5일 의용소방대상 시상식)

근로시간 등 조절로 고용불안 없애야

○…최근 일부 대기업에서는 고용조정 차원에서 대량감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감원은 구조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경영합리화가 우선되지 않고 노·사 협의과정 없이 대량감원 방침을 발표하는 것은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생산의욕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해고를 최대한 자제하고 인력재배치·일시휴업·근로시간 조정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기업의 해고자 제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고용보험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李起浩(노동부장관, 12월4일 서강대 최고경영자과정 특강)

올바른 선택으로 새로운 100년을

공명선거 캠페인

〈IMF지원…경제살린 외국사례〉

‘경제회복 국민동맹’ 救國 구심점 수출 크게 늘며 대외 신인도 되찾아

IMF의 금융지원을 받기 전 멕시코 경제는 살리나스 정부(87.12~94.11) 기간 중 중남미 및 개도국들의 선망의 대상인 가장 바람직한 경제 모델이었다.

그러나 살리나스 정부의 인위적인 폐소화 고평가 정책과 새로 들어선 세디요 정부가 이에 대처하기 위해 취한 폐소화 평가절하 조치는 국내외 투자 가들의 멕시코 정부의 경제정책 운영에 대한 신뢰도를 급격히 저하시켰으며, 폐소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과 외환보유고의 급감, 경상수지적자 증가, 1년이내 만기도래 달러표시 채무의 유통규모가 2백60억달러에 달하는 등 달러의 유동성 부족현상이 심화되면서 금융위기를 맞게 됐다.

멕시코는 이러한 금융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미국과 IMF 등을 통해 국제금융기관의 조절자금 총 5백27억6천만달리를 지원받게 됐다.

95년도 물가상승률 45% 부가세 5%p 높여잡아

IMF지원이후 멕시코 경제는 금융시장의 위축에 따른 유동성 부족 및 대출지원 부족과 내수경기의 침체로 인해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휴·폐업 또는 도산함으로써 4% 미만이던 실업률이 일거에 7%를 상회하게 됐으며 금융기관도 95년중 32개주 3개은행이 도산했다. 이러한 상황을 맞게 된 멕시코 정부는 95년3월 경제회복계획을 발표, 95년중 물가상승률 45%,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2%, 최저임금 10% 인상제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15%인상, 가솔린과 정유가격 35%인상, 폐소화의 자유 변동환율제 유지 등의 경제계획을 발표했다.

멕시코 정부는 95년중 2차례에 걸

멕시코

쳐 인플레 억제를 위한 임금상승 억제, 공공요금 인상억제, 정부재정지출 축소를 위한 균형예산을 추진함과 동시에 소위 ‘경제회복을 위한 국민동맹’을 대통령을 포함한 전 경제각료 등 정부대표, 각종 보조대표 및 경영자 단체대표, 농민대표, 각지방 정부대표 사이에 맷음으로써 이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등 대국민 단합으로 활용함으로써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노동계의 임금인상요구 억제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지원자금 전액 조기상환 올해 GDP성장을 7%

이러한 정부시책과 국민들의 호응 그리고 폐소화 약세에 힘입어 95년 하반기부터 수출산업의 성장세 지속과 멕시코 경제에 대한 신뢰도 제고로 외국인 투자가 급증함으로써 97년에 들어서는 금융위기 이전의 경제수준을 회복하게 됐으며 GDP성장률은 95년 중 마이너스 6.9%였던 것이 97년 상반기 7% 들어났으며, 실업률도 4%로 저하됐다.

멕시코가 94년말 금융위기를 2~3년내에 극복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요인은 세디요 정부의 임금상승 및 물가안정을 위한 긴축재정금융, 외국인 투자유치확대, 공기업의 민영화 및 수출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이며 이에 대한 국민과 노조들의 전폭적인 지원 등 국민 전체의 자발적인 고통분담 덕택으로 평가되고 있다. ■

柳云永

멕시코 대사관 공보관

‘고용증대보다 인플레 억제’ 주효 노조규제 ‘영국병’ 치유 발벗고 나서

영국

개발도상국의 외채상환 불능으로 인해 국제금융위기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80년대 이전까지 영국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금융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였다. IMF가 활동을 시작한 47년이래 79년까지 모두 3회에 걸쳐 1백25억SDR(특별인출권)의 자금을 받았다.

‘74 오일쇼크 후 환율 급락 외환보유고 감소 이어져

영국은 76년말 파운드화의 對달러화 가치 하락, 인플레이션, 외환보유고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2차 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금융·외환 위기를 맞게 된다.

통화팽창을 통한 경제성장 정책을 구사하고 있던 노동당 정부는 74년 오일쇼크 후 세계경제의 침체와 무역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정책만을 고집, 76년 3월 파운드화의 환율급락, 물가상승, 외환보유고 감소 등을 불러온다.

따라서 76년 9월 영국은 결국 IMF 자금 도입을 결정하게 된다.

영국 정부로부터 차관 신청을 접수한 IMF는 그해 12월 차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총 40억달러 규모의 차관 제공을 약속하고 △보다 폭넓은 통화긴축 △수입제한 정책 △금융시장 개방 △파운드화 균형을 위한 금융제도 개선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영국 정부는 차관 도입을 위해 수입정책과 관련한 무역규제 철폐, 국제수지 방어를 위한 규제도입 반대 등 IMF의 조건을 수용함으로써 결국 차관도입 예정기간(76.12~79.1)중 차

국의 금융·화폐 정책 결정권을 포기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긴축·통화억제 정책 병행 국민협조 불황터널 뚫어

IMF의 긴급차관 도입 이후 영국 정부는 IMF조건에 의거한 자구책 마련에 매진, 경제 긴축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했다.

공공 지출규모를 77~78년 10억파운드, 78~79년 15억파운드씩 각각 축소했으며, 공공부문 외부 차입도 76년 11.3억 파운드에서 8.7억 파운드(77~78년), 8.5억 파운드(78~79년)로 축소했다. 또 영국 정부는 공공부문 부채를 줄이기 위해 정부 소유의 ‘영국석유’ 주식 6억 파운드를 매각하는 한편(77~78년), 통화팽창 억제정책도 병행해 실시했다.

그러나 통화가치의 하락보다 영국 경제를 어렵게 한 것은 끝없이 쇠락해 가던 국력과 산업경쟁력 저하였다.

그러나 보수당을 이끌고 등장한 마거릿 대처 수상은 IMF지원을 계기로 고용보다는 인플레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자유경쟁체제의 증진, 정부 역할 및 공공지출 축소, 노조 규제로 이른바 ‘영국병’의 치유에 발벗고 나선다.

마침내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하나로 뭉친 영국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경제를 구현, 최악의 상황으로 까지 치닫고 있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르렀다. 따라서 IMF의 금융지원은 영국으로 하여금 급한 불을 끌 시 간적 여유를 주고, 국제 통화체제의 붕괴를 막는 수단이 되기에 충분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영국 대사관 공보관실

경제난 극복 의식조사

“감원보다 임금줄여 실업 막아야” 87.7% 절약운동·고통분담에 92.9% 긍정적

이번 IMF(국제통화기금)의 자금지원과 관련, 우리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62.7% 의견으로 IMF의 자금지원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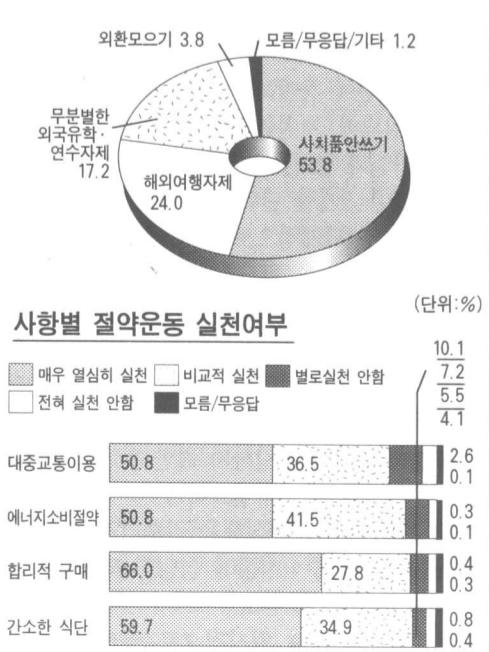
공보처가 지난 2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경제난 국 극복을 위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경제난 국 극복을 위해 전개되고 있는 범국민적 절약운동과 고통분담에 대부분 국민들(92.9%)이 자발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한 기업의 감량 경영에 따른 ‘인원감축’ 문제와 관련, ‘인원감축대신 임금을 인하함으로써 실업률 증가를 막아야 한다’는 견해가 87.7%로 대다수 국민들이 인원감축보다 임금인하를 통한 실업률 증가 억제를 선호하

고 있는 가운데 임금인하 감수수준에 있어서는 ‘10% 정도’가 37.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부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이 실천해야 할 과제중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는 ‘외국 환화 사치품 안쓰기운동’(53.8%)을 들었으며 다음으로 ‘해외여행자제’(24.0%) ‘무분별한 외국유학 및 해외연수 자체’(17.2%) 등을 꼽았다. 또한 정부와 기업의 실천과제로 정부는 우선 ‘물가안정’(43.4%)을 위한 정책과제에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금융개혁과 부실채권 정리’(21.4%) ‘강력한 긴축정책 추진’(12.6%) ‘무역수지 개선과 외환보유 확충’(12.2%) 등을 제시했다. 기업에 대해서는 ‘품질개선·신상품 개발 등을 통한 품질경쟁력 강화’(44.7%)가 가장 시급하다고 말한데 이어 ‘방만한 계열사 정리 및 업종 전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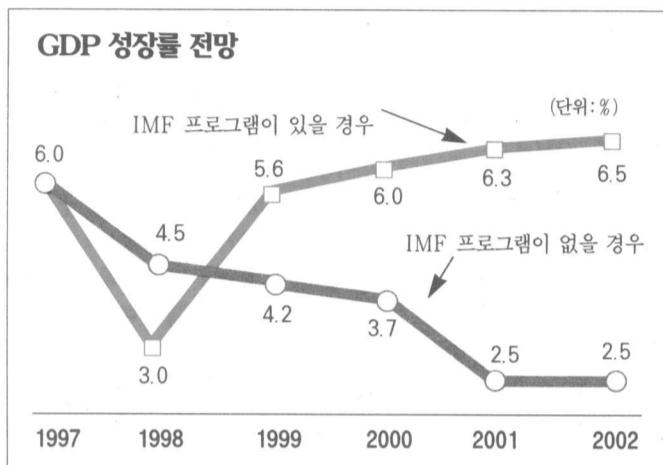
외환부족 해결위한 실천사항



(27.4%) ‘자기자본비율 증가’ (11.6%) 등을 지적했다.

洪永模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5일 이사회를 열고 한국에 대한 긴급 자금지원을 결정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이제 당면했던 외환위기 및 경제위기를 벗어날 출구를 마련했다. 세계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경제 모범생이던 우리 경제가 IMF의 지원을 받고서야 위기를 넘기게 된 것은 물론 압축성장과정에서 후진적인 경제시스템과 경쟁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IMF지원이라는 엄연한 현실을 냉엄하게 받아들이는 한편 이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우리 스스로가 해내지 못했던 금융 및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21세기를 향한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IMF 시대에 우리경제는 어떤 모습을 갖게될 것인지, 그리고 IMF시대를 조기에 졸업하기 위해 경제주체는 어떤 노력을 해야할지를 문답으로 풀어본다.



- IMF 자금지원 합의내용에 따라 거시경제 목표가 달라지는데 내년 이후의 목표도 저성장 등으로 맞춰야 하는가.

합의내용은 내년과 99년의 경상적자를 GDP의 1% 이내에서 유지하고, 물가는 5% 이내로 유지하도록 돼있다. 성장률의 경우 내년에는 3% 정도로 하되 99년에는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회복한다는 것이 양측의 합의다. 따라서 99년 경제성장률은 올해 성장예상을 6%와 비슷한 5.6%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물가상승률도 내년도 5.0%에서 99년은 4.6%로 다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합의된 목표는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활력을 찾기 위해 감내해야 하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목표에 맞춰 거시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IMF 자금의 성격은 무엇이며 자금과 지원조건 이행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IMF 자금은 회원국의 일시적 외화유동성 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저리로 지원되는 자금이다. 멕시코 등의 경우에서 보듯이 자금은 지원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자금과 함께 지원되며, 지원규모와 조건은 IMF 및 참여국가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IMF자금은 3개월 단위로 지원조건 이행을 점검한 후 단계적으로 추가지원이 이뤄지므로 지원조건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IMF 입장에서는 빌려준 자금의 상환을 보장받기 위해 어느 정도의 요구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우리 입장에서도 부실채권의 조기정리, 경상수지 흑자전환 등 우리 경제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합의내용대로 통화정책을 긴축기조로 전환하면 기업과 주식시장에 상당한 파급영향이 우려되는데.

긴축정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금리가

'IMF시대' 우리경제 문답풀이

‘감원없는 구조물가 상승-하락’

우리 경제 거시지표 전망

• IMF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경상수지(억달러)	△135	△43	△21	△22	△36	△45
소비자물가상승률(%)	4.3	5.0	4.6	4.1	3.7	3.3
실업률(%)	2.5	3.9	3.8	3.5	3.2	2.9

• IMF 프로그램이 없을 경우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경상수지(억달러)	△135	△59	△32	△11	3	29
소비자물가상승률(%)	4.3	5.1	4.6	4.2	3.9	3.5
실업률(%)	2.5	3.2	3.6	4.2	4.9	5.1

상승함으로써 기업의 금융부담이 가중되고 주식시장의 위축이 생겨날 수도 있다.

그러나 긴축에 따른 단기적인 고금리는 외화유입을 촉진해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또 최근의 환율상승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을 흡수하기도 한다. 또 긴축과 함께 보완책으로 병행되는 자본시장개방 확대조치는 해외자리자금 이용기회를 실제로 확대시켜 기업의 금융비용부담 완화와 금리 안정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화긴축정책은 성장률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경상수지적자 조기 해소 → 외환보유고 확충 → IMF 지원자금 상환'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IMF가 예시한 사항들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한 후 빠른 시일내에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언론에서 내년 성장률을 3%대로 낮출 경우 실업자가 1백만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는데 실제로 실업자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

IMF의 권고에 따라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금융산업과 실물경제의 구조조정을 서둘게 되면 실업이 증가할 요인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이 하락한다고 해서 반드시 실업이 증가한다고 볼 수는 없다.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기업이 실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

편 정부도 실업문제의 완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 이기 때문이다.

이미 기업의 경우 폐업이나 감원 대신 임금동결을 비롯해 일시휴업이나 근로시간 단축, 사외파견 등을 통해 '감원 없는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 역시 고용보험 확대와 고용조정지원 프로그램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물가불안요인이 많아 내년 이후 물가가 폭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환율급등의 영향으로 유가를 비롯한 수입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내년도의 물가상승률이 다소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물가상승 요인과 함께 경기 위축에 따른 서비스요금 하락, 임금상승률 둔화 등의 물가하락 요인이 함께 작용하게 되는 만큼 내년도의 물가가 폭등할 것으로만 볼 수는 없다. 더군다나 IMF와의 합의 내용에 물가를 5% 내에서 안정시킨다는 항

긴축따른 단기적 고금리 외화유입 늘어 换市안정

대문 활짝 열린 자본시장 해외 低利자금 이용 기회

- 내년도 재정긴축은 어떤 수단을 통해 어떤 규모로 이뤄지는가.

내년 예산은 현재 통합재정수지 기준으로 GDP 대비 0.2% 수준인 1조1천억원의 흑자로 편성돼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여건변화 및 금융부문 구조조정을 위해 GDP 대비 약 1.5%의 재정적자가 발생할 전망이나 이를 재정부문으로 흡수, 수지균형 혹은 약간의 적자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통합예산에서 GDP 대비 약 1.5% 수준인 7조원 가량의 세입증대 및 세출삭감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 7조원 가량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

목이 포함돼 있는 만큼 물가폭등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 최근 환율 폭등세가 진정국면에 들어서고 있는데 환율이 다시 급등할 가능성은 없는가.

지금까지 환율이 급등한 것은 경상수지 적자 및 외채상환 등의 외환 수요에 비해 대기업의 연쇄도산 및 금융기관 부실화 등으로 인한 국제신인도 하락으로 외화조달이 원활치 못해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IMF의 자금지원이 본격 이뤄지면 외화의 대량유입으로 단

기적인 유동성 부족 현상이 해소돼 환율 상승은 기세가 꺾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각종 경제연구소들은 우리의 기초경제 여건을 감안, 균형환율 수준은 대략 달러당 9백원에서 9백50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 금융산업 구조조정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이 과정에서 예금인출 불능사태 등 예금자들이 불이익을 보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인가.

IMF와의 합의에 따라 금융개혁법안의 연내 통과 등 강력한 금융부문 구조개선을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이미 지난 2월 9개 부실 종금사에 대해 업무를 정지시킨 바 있으며, 앞으로는 어느 금융기관이라도 일정 기준 이상으로 부실화가 진행될 경우 정리가 불가피하게 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예금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예금자 보호를 위해 은행·종금사·상호신용금고·증권회사의 경우 1인당 최고 2천만원까지, 보험회사의 경우 최고 5천만원까지 보장해주던 제도를 보완,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예금원리금 전액을 보호해주기로 했다. 따라서 이때까지는 예금자가 금융기관에 자신의 예금을 폐기 염려가 전혀 없어진 셈이다.

- 사상초유의 IMF 금융지원 시대를 맞아 경제주체들의 대응이 중요해졌다.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정부는 IMF와의 합의내용을 지키면서 우선 우리 금융시장과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하면서 금융산업과 실물경제의 구조조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부실금
예금원

정
경

‘조정’ 긴요 각요인 半半

정부가 먼저 씀씀이를 줄이고 경쟁력을 높이는데 솔선수범함으로써 다른 경제주체의 경제살리기 동참을 이끌어내 IMF 자금의 조기상환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미 IMF 협약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후속대책을 준비하기 위해 ‘경제대책회의’를 운영하는 한편 재경원을 비롯한 각 부처들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대책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기관 정리 필요 자금은 전액 보호

부, 합의내용 충실히행 생력 높이기 솔선수범

- 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기업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기업은 이제까지의 투자패턴에서 벗어나 경쟁력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수익성과 전망을 보고 투자해야 한다. 문어발처럼 거느린 기업 중 한계기업으로 판명이 났거나 장기적인 전망이 불투명한 계열사의 경우는 과감하게 매각 혹은 합병해야 한다. 최근 분위기에 편승한 가지치기 정도가 아니라 주력이 아닌 업종의 과감한 포기 등 고단위 처방이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기술개발을 서둘러 외국의 상표를 들여다 손쉬운 돈벌이를 해온 영업방식을 버리고 외국산보다 싸면서도 품질이 좋은 세계 일류의 상품으로 글로벌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 금융구조개혁의 직접적인 대상인 금융기관은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금융기관들은 이제 과감한 인수합병(M&A)을 통해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를 이루하고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 금융기관 역시 리스트럭처링을 위해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부동산·주식·채권·대출자산·점포 중 필요치 않은 모든 자산을 신속하게 매각한다는 원칙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大馬不死라는 신화

기업, 문어발식 경영 지양 質 좋은 상품제조 주력을 근로의식회복 발등의 불 국산품애용 애국하는 길

업을 위한 관건이 될 수도 있다. 이제는 마른 수건을 짜듯 외식비·교통비·통신비·여행비·사교육비 등 모든 비용을 최소화하고 저축을 늘려야 한다. 연간 8조원에 이르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일도 가계와 경제를 일으키는 일이다. 찾아보기만 하면 우리 주변에서는 다양한 절약 및 내핍운동 방식이 많다. 지금은 1달러와 1원이 아쉬운 때라는 의식을 가지고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

I. 거시정책

1. 거시경제목표

- 경상수지 적자를 98년·99년에 GDP의 1% 이내에서 유지
- 물가를 5% 이내로 유지
- 성장률을 98년에 3% 정도로 하고 99년에는 잠재성장을 수준으로 회복

2. 통화 및 환율정책

- 통화정책은 현재의 위기극복에 대한 당국의 결연한 의지를 시장에 나타내면서,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최근의 원화절하에 따른 물가상승압력을 흡수하기 위해 즉시 긴축기조로 전환

- 따라서 최근 대규모로 공급된 유동성은 환수되어야 하며 현재 14~16% 수준인 시장금리는 시장안정을 위하여 상승을 용인

- 98년 중 통화증가율은 물가상승률을 5% 이하로 안정시키는 수준으로 억제

- 신축적인 환율정책 유지하고 시장개입은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는데 국한

3. 재정정책

- 통화관리의 부담을 덜고 아직 규모를 특정할 수 없는 금융부문의 구조조정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1998년에도 긴축재정기조는 유지되어야 함

- 1998년 통합재정수지는 경기회복의 지연에 따라 GDP 대비 0.8% 정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II. 금융부문 구조조정

보다 국제적인 관행에 따르는 방향에서 재검토되어야 함. 특히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해 보유고를 예치하는 것은 더 이상 증가시켜서는 안되며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점차 줄여야 함. 금융기관들의 금융자산 수익률 및 위험도 평가능력을 향상시켜야 함

III. 기타 구조개혁

1. 무역자유화

- WTO 양허계획에 맞춰 다음 사항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정수립
 - 무역관련 보조금의 폐지, 수입승인제 폐지,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 수입증명 절차의 투명성 제고

2. 자본자유화

- 현재의 자본자유화 일정은 다음 사항과 관련한 단계적 조치를 통하여 보다 앞당겨져야 함
 -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97년 말까지 50% 까지, 98년 말까지 55% 까지 확대

- 외국인의 국내 단기금융상품 매입을 제한없이 허용함

- 국내 회사채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제한없이 허용함

-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제한은 절차간소화를 통해 더욱 축소되어야 함
 - 민간기업의 해외차입 제한 철폐

3.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구조

- 독립적인 외부감사, 완전공시 및 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의 공표 등을 통

IMF 자금지원 합의내용(요지)

1. 금융개혁법안

-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다음의 금융개혁법안들은 금년 말까지 통과돼야 함

2. 구조조정 및 개혁조치

- 회생불가능한 부실금융기관은 문을 닫아야 하며, 회생가능한 부실금융기관은 구조조정과 자본확충이 필요

- 부실대출정리는 가속화되어야 함

- 현재의 예금전액보장제도는 3년내에 끝내고 부분보장제도로 대체되어야 함
 - 모든 은행은 BIS(국제결제은행)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추진일정 수립

- 건전성 감독기준은 BIS의 감독핵심원칙에 맞추어 상향조정되어야 함

-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시 반드시 조건이 부과되어야 함

- 한국은행 유동성지원을 제외한 금융기관에 대한 모든 지원조치는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기록돼야 함

- 회계 및 공시에 관련된 규칙은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강화되어야 하며, 대형금융기관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회계법인에 의해 감사를 받도록 함

- 종금사에 대한 감독인력은 충분히 보강되어야 함

- 국내금융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개방계획이 가속화되어야 함. 특히 98년 중반까지 외국인의 은행현지법인과 증권사설립이 허용되어야 함

- 국내은행 해외지점의 차입 및 대출활동이 건전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점검되어야 하며, 유지가 어려운 지점들은 폐쇄되어야 함

-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관리방식은

해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회계원칙을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도록 추진일정을 수립

• 은행대출의 상업성이 존중되어야 하며 정부는 은행경영과 대출결정에 개입해서는 안됨. 농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금융은 유지하되, 이에 따른 이자손실은 예산에서 부담해야 함

• 개별기업을 구제하기 위하여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제지원을 해서는 안됨

• 금융설명제는 일부 보완방안을 검토할 수는 있으나 기본골격은 계속 유지

• 기업의 높은 부채-자본비율을 축소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기업자금조달의 은행차입 비중을 축소하도록 자본시장을 발전시켜야 함

• 상호채무보증은 위험이 큰 만큼 재벌내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 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조치가 시행되어야 함

4. 노동시장개혁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추가적인 조치와 함께 노동력의 재배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제도의 기능을 강화해야 함

5. 정보공개

외환보유고의 구성 및 선물환 순포지션 등을 포함한 외환보유고 관련자료는 당해 월말·분기말로부터 2주내에 정기적으로 발표하여야 함. 부실여신, 자본의 적정성, 소유구조 및 결합형태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자료들은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공개되어야 함. 단기외채자료는 분기별로 공표함 ■

한마디

한복 자주입어 주체성 일깨우자

金俊榮

문체부 문화산업기획과장

한복입기추진위원회와 문체부가 공동으로 '한복입는 날' 까지 정해가면서 한복입기를 강력히 권장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일은 누군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판단으로 지난 해 12월4일 매월 첫째 토요일을 '한복입는 날'로 지정 선포하고 이번에 1년을 맞았다. 한복은 동서고금의 그 어떤 의상보다 단연 출중함에도 불구하고 촌스럽고 불편한 옷으로 잘못 인식돼 왔다. 그것은 아마 일제 지배와 서양문화의 유입으로 내것을 업수이 여기는 풍조에 영향받은 바 크다.

첫주 토요일 '한복입는 날'

한복입는 날 선포 이후 최근들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거리에 나가 보면 한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을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됐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복을 입으면 무슨 '독립투사' 같아 이상한 눈초리를 보내기도 하여 한복을 떳떳이 입고 다닐 수 없는 사회분위기였다.

한복입는 날 선포는 이와 같은 굴레를 벗겨준 효과가 있었다. 또 매주 토요일은

'자율복장의 날'로 지정되어 있어 누구나 자유로운 복장으로 출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런 토요일에 한복을 입으면 그 다양성과 변화가 가정과 직장과 거리를 훨씬 밝고 명랑하게 만들 것이다.

나라마다 고유의상 홍보

웃은 민족정신이란 말이 있다. 민족정신은 우리의 주체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남의 옷을 입고 주체성을 논하기는 어렵다. 최근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자국의 고유의상을 홍보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그것은 자기들의 존재와 문화민족임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한복을 알릴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2000년의 ASEM, 2002년의 월드컵 등 굽직한 국제행사가 준비돼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우리의 내실을 견고히 다진다는 의미에서도 한복을 입어야 한다. 꼭 매월 첫째 토요일만 한복을 입을 게 아니라 매주 토요일 또는 그 이상으로 확대해도 좋을 것이다. 한복은 훌륭한 문화유산이며, 문화산업적으로도 경쟁력을 가진 하이파션이다.

이 좋은 소재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뒷날 크게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 ■

이사람

20년 무사고 최우수기관사 뽑혀

**陸賢吉**

대전기관차사무소 기관사

"철도 기관사에도 '탑건' 제도를 도입, 5천여 기관사들에게 긍지를 심어주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 무엇보다 기쁜데다 첫번째 탑건으로 까지 뽑혀 영광입니다."

지난 2일 국내 최우수 기관사로 뽑힌 대전기관차사무소 소속 陸賢吉(철도원 7등급·38)는 철마와 함께 해온 지난 20년동안 53만4천km(11월말 현재) 운전 무사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는 95년 12월 40만km 무사고 운전을 달성, 철도청장의 표창을 받기도 했다.

陸씨는 철도청이 모든 소속 기관사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실시한 △동력차 제동취급 △운전속도 측정능력 △정지위치 합치도 △정차시 충격정도 등 10개 항목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 가장 우수한 성적을 냈으므로써 이번의 영예를 안았다.

정차때 충격 최소화 기본

"철도기관사로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운행능력은 정지위치의 정확성과 정차시 충격의 최소화입니다. 이 제도가 실시됨으로써 모든 열차의 안전운행에 도

움이 됐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철도청이 이같은 '탑건' 제도를 도입한 것도 고객중심의 경영혁신을 위한 것으로 앞으로 매년 '으뜸'과 '버금' 기관사를 선발해 나가기로 했다.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를 주로 운행하는 그는 모든 기관사들이 그렇듯 승무 스케줄에 따라 출퇴근시간이 매일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리듬을 잊지 않기 위한 체력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고객안전에 최선" 좌우명

그는 쉬는 날이면 체력관리를 위한 노력과 함께 서예를 통해 심신을 달랜다. 그의 동료들은 특히 서예(隸書) 필체에 관한 일견이 있다고 전한다.

1년이면 보통 6만km 정도 운행하는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지도기관사로 후진양성에 열의를 아끼지 않고 있는 그는 '최선을 다하자'는 좌우명 아래 다시 '1백만km 무사고운행'을 위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洪永模기자



돌반지 모아 "애국"

부산시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5일 오전 부산시 민회관 대강당에서 '경제살리기 결의대회'를 열고 회원들이 가정에서 보관하고 있는 돌반지를 비롯한 각종 패물을 모아 나리빛을 갚는 데 사용하자며 모금함에 넣고 있다.

"나라경제 살리기 공직자가 앞장서야" 북제주군 우수공무원 특별상여 반납

최근 중시폭락·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가경제가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제주도 북제주군 전 공무원들이 연말 우수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별 상여수당을 모두 자진 반납키로 해 화제가 되고 있다.

군 공무원들은 부도위기에 몰린 국가경제를 체감하고 경제살리기 운동에 공직자가 솔선수범함으로써 범군민적인 동참 분위기를 이끌어 내자는 취지로 군정조정위원회의 및 실과 주무계장 회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특별상여수당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 1년동안 근무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 북제주군은 모두 75명이 4천만원의 특별 상여수당을 받기로 돼 있었다. 상여수당을 반납키로 한 북제주군의 한 공무원은 "나라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공직자들의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일반국민들에게 큰 힘이 된다"며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사회전반에 경제살리기에 대한 공감대 확산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97년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조달청·노동부 유엔기준의 배 지자체 최고는 서울 21.4%

평균치는 12%권고 밀돌아

중앙부처 및 시·도청 산하의 각종 위원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유엔 권고기준 12% 수준보다 다소 낮은 1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무장관(제2실)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1천1백86개의 정부위원회 가운데 특수성격의 위원회 2백72개를 제외한 9백14개 위원회 위촉직 위원 1만1천2백69명 가운데 여성은 1천2백5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앙부처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은 10.4%에 그쳐 지난 해 9.2%에 비해서는 1.2%포인트 높아졌으나 시·도의 11.4%보다는 1%포인트 낮았다.

이를 중앙부처별로 보면 정무장관 제2실 69.2%로 가장 높았으며, 조달청 28.6%, 노동부 24.3%, 총무처 18.9%, 보건복지부 15.0%, 농림부 13.5%, 정보통신부 11.6%, 법무부 10.8%, 행정조정실 10.3%, 특허청 10.1%, 교육부 7.8%, 농촌진흥청 6.3% 순이었다.

시·도청의 경우는 서울이 21.4%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 20.0%, 강원 18.1%, 대전 14.1%, 인천 12.9%, 충남 10.6%, 제주 10.5%, 경남 1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엔의 권고기준은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을 올해 12%, 98년 15%, 99년 18%, 2000년 20%, 2005년 30%로 돼 있다. <도표참조>

이에 대해 정무제2장관실 관계자는 "목표율 달성을 부진한 기관들에 대해서는 정밀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개선 대책을 수립토록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방·과학·경제 등 일정한 분야에서는 자격과 경험을 갖춘 여성인력이 부족한 점도 인정되지만 상당수의 위원회들이 여성의 참여를 구색 맞추기로 여기는 등 여성참여 확대에 대한 의지가 여전히 부족한 형편"이라고 말했다.

全宣珠기자

■유엔 권고기준 연도별 목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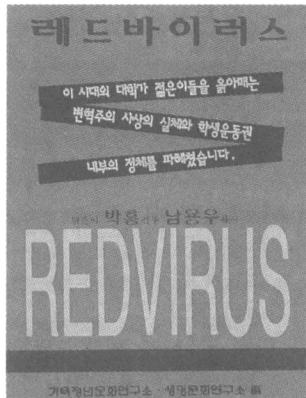
연도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	12	15	18	20	22	25	27	28	30

무관심이 부른 불씨 평생두고 후회한다

화재예방 표어

내가 읽은 책

학원침투 주체사상 심층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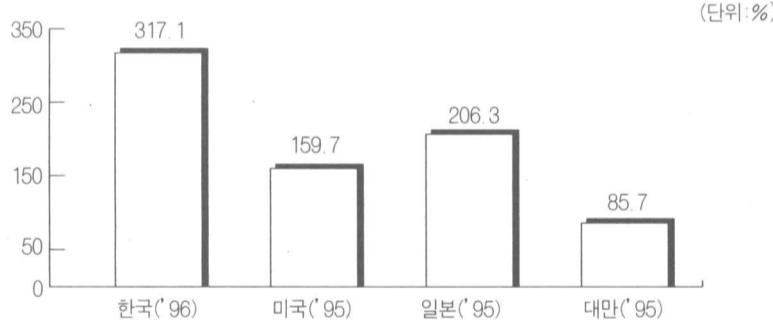
박문양

공보처 여론국 사진담당관

이 책은 그동안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불순한 세력들을 질타하고 퇴폐·향락문화에 대해 거침없이 비판한 것으로 유명한 박홍 전 서강대총장이 최근 기독청년문화연구소장 남용우 목사와 함께 한국 학생운동에 깊숙이 침투한 병원군·저질 자본주의로 인한 퇴폐·향락·저질소비 문화, 퇴물로 전락한 마르크스 레닌주의, 김일성 주체사상등의 실체를 심층적으로 조명한 책이다.

그래픽 뉴스

한국 제조업 부채비율 미국의 2배



우리나라 제조업 업체들의 부채비율이 외국 기업들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3백17.1%로 미국 기업의 1백59.7%보다 2배가량 높고, 대만보다는 거의 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부채비율은 기업의 높은 금융부담으로 이어져 취약한 재무구조에 따른 경쟁력의 약화를 불러올 수 밖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우리 경제 전반의 구조적 한계로 작용, 외환위기를 불렀고 끝내 IMF의 자금지원을 불러들이게 된 것이다.

영어한마디 <109>

선거일이 열흘 남짓밖에 남지 않아서 그런지 요즘 어디에서나 선거얘기로 가득하다. 지난 주에는 'run rings' (우세하다)를 소개했는데, 오늘은 'ring'을 이용한 다른 표현으로 'throw one's hat into the ring'에 대해 잠시 논의하고자 한다. 이 표현의 의미는 '입후보하다'로서 여기에서 'ring'은 '원' 뿐만 아니라 '(경기·권투·씨름)장'을 의미한다. 잠시 다음의 대화를 보기로 하자.

A: We have to hold an election for a new social director. I'm not sure about either of the current candidates.

입후보 선언

(동우회의 회장을 새로 뽑아야 해요. 저는 현재 후보자들 중 누굴 뽑아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B: Yeah. There's not much to choose from unless somebody else throws their hat into the ring.

(그래요. 다른 사람이 입후보하지 않으면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죠.)

위의 대화에서 보면, 'somebody else'의 대명사로 복수형인 'their'가 쓰인 것을 볼 수 있다. 'somebody else'의 의미에는 단수도 포함되지만, 문법적으로는 복수 대명사가 흔히 쓰인다.

Michael Glass
조숙환
(西江大교수)

이 책은 '레드 바이러스'를 인간사회 의 골수까지 침투하여 파멸만을 가져오는 무서운 '전염병'으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전염병의 위험성을 젊은이들에게 알리고 사상적·정신적 항체형성을 위한 생명운동과 인성운동에 모두가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있어 이념적 혼란을 겪고 있는 청년학생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사상·정신적 항체형성 호소

또한 학생운동을 막연히 미화, 영웅시하거나 혹은 무작정 나쁜 것으로 비판해 오던 기존의 도서들과는 달리 '주체사상'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는 한국 학생 운동의 오류와 모순성을 사제로서의 양심과 명확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조목 조목 비판하면서 바람직한 학생운동의 방향과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저자는 과거 학생운동이 인간존중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인권신장과 정의로운 사회개혁을 위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인정하고 있다. 또 이 때문에 학생운동은

시민들로부터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받는 한편 그들의 순수하고 참신한 외침은 이 사회의 희망이 되고 있다는 찬사를 받아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 대학에는 '주체사상'이 뿌리깊이 침투하여 '지성의 전당'이라는 본연의 의미는 퇴락하고 소위 '주사파' 학생들의 투쟁의 본거지로 전락해 버렸으며, 이로 인해 우리 사회 전체가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적 가치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심지어 국가의 정체성마저 부정되는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저자는 '우리 대학생들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지경에 처하게 됐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그에 대한 사상적 원천을 캐기 위해 지난 10여년간 국내외 강의실·교도소는 물론 MT·아지트를 몸소 찾았더니며 운동권 학생들을 직접 접하고 만나면서 많은 전략·전술적 자료도 접할 수 있었다.

자유민주주의 벼랑에 몰아

그 과정에서 우리 대학생들이 북한의 주장을 동조하고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은 물론 투쟁지령을 직접 받아 자신들의 투쟁전술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 이들의 사상적 오염이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 심각한 상태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붉은 사상에 물든 학생운동을 아직도 '민주화운동'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들 내부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레드 바이러스'를 별 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고 청년학생들의 철없는 행동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을 '어용교수'로 매도하는 설익은 지식인들이 운동권 사회에서 굉장히 대우를 받으면서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점에서 이 책은 한국의 학생운동사를 공산주의 운동사로 자리매김하려는 친북 운동권 학생들의 독단을 꾸짖고 일부 대학생들을 몰역사적 자기도취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일단의 책임감과 균형감각을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정의·사랑추구 등 처방제시

저자는 좌경화로 오염되어 가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을 사상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처방은 △생명가치의 내면화 교육 △공동선 가치의 내면화 교육 △연대성 가치의 내면화 교육 △정의·사랑 가치의 내면화 교육이라는 4가지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이야말로 추상적인 이론이나 강요보다 감동과 감명·경험을 통해 스스로 받아들이면서 치유에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듯이 사상적 오류에 빠져 있는 학생들을 구출하고 더이상 젊은 청년학생들이 잘못된 이념적 올가미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 공직자들이 이 시대 대학가 젊은이들을 옮아매고 있는 변혁운동사상의 실체와 학생운동 내부의 정체를 올바르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벽에 틈이 생기면 바람이 들어오고 마음에 틈이 생기면 마(악마)가 들어오기 마련이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의 사랑스러운 후배들, 우리 동생들이 케케묵은 이념의 함정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지금 그들에게 생명수와도 같은 진리를 일깨워 주기 위해서도 이 책은 한번쯤 시간을 갖고 읽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더이상 우리 대학의 강의실이 겸게 타고 무고한 시민이 폭행 치사당하는 불행한 사태가 대학교정에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이 간절하기 때문이다. ■

『레드 바이러스』

박홍·남용우 역음
도서출판 거목刊·1997版



창덕궁·수원화성 세계문화유산 지정

우리나라의 창덕궁과 수원화성(사진)이 지난 3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창덕궁은 동아시아 궁궐·건축 및 정원 디자인의 뛰어난 원형으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룬 형식의 탁월함을 인정받았고, 화성은 근대 초기의 군사건축으로 동서양의 과학을 통합해 발전시킨 건축물로서 평가를 받았다.

이로써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우

리나라의 문화재는 지난 95년 지정된 석굴암과 불국사·팔만대장경 장경판고·종묘를 포함해 모두 5개로 늘어났다.

한편 세계유산위원회는 역사적·미적·과학적 관점에서 인류공동의 자산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를 세계유산으로 지정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정된 세계문화유산은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리스의 아크로폴리스, 중국의 만리장성 등 3백80여건이다. ■

지자체 소식

시민이용 문화정보자료실 개관

서울시는 지난 2일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인 문화정보자료실을 개관했다. 시청 서소문 별관 2동 1층에 80평 규모로 설치된 이 문화정보자료실은 문화예술 분야별 전문도서 3천여권과 비디오·CD를 이용한 음악·영화감상 등을 할 수 있는 비디오·오디오 시스템, 국내외 문화예술 정보를 직접 검색할 수 있는 PC통신·인터넷 코너 등이 있다. 특히 국내외 관광객·학생·문화단체·시민등을 대상으로 서울문화를 소개하고 세미나·강좌 등 문화예술 교육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영상실도 설치돼 있다. 문화정보자료실 이용시간(일요일·공휴일 제외)은 동절기 09:00~16:30, 하절기 09:00~17:30까지이며, 단체관람은 문화정보기획단(3707-8325~6)을 방문, 하루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의정부에 장애아 보호시설 건립

경기도 의정부시에 내년 〈경기〉 장애아동 보호시설이 건립되고 전용 셔틀버스도 운행된다. 의정부시는 지난 4일 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들이 안심하고 맞벌이를 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녹양동 386 일대 장미 5토지구획지구 내 1백80여평의 부지에 지상 1층, 연면적 1백여평 규모의 장애아동 보호시설을 건립키로 했다.

시는 내년초 부지를 매입한 후 물리치료실·재활교육장·목욕시설 등을 갖춘 장애아동 보호시설 건립공사를 시작, 연말 완공과 함께 휠체어를 타고 승·하차할 수 있는 장애인 셔틀버스도 운행할 계획이다.

종합청사개시판

‘한국 고대 토기전’ 개최

문화체육부 국립중앙박물관은 고구려·백제·신라·가야의 가치있는 토기를 한자리에 모은 ‘한국고대의 토기전’을 12월 2일부터 내년 2월 1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흙·예술·삶과 죽음’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기마인물형토기·토우부장경호 등 국보 지정문화재를 비롯, 4백50여점이 선보이게 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최근 출토된 토기중 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무덤 속의 유물 또는 제사와 관련된 토기들을 일반에 공개한다. 문의 398-5112

‘도로불편 신고센터’稼動

건설교통부 국도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신고받기 위한 ‘도로 이용 불편신고센터’가 지난 1일 전국 25개 국도 관리기관에 일제히 설치와 함께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도로통행시 느끼는 시설관련 불편사항이나 불편 해소 방안 등의 의견을 이 센터에 알려오면 즉시 현지조사를 통해 시정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

부천, 지자체 첫 직장캠퍼스 개설

경기도 부천시가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직장캠퍼스(야간대학)를 설치해 공무원들이 정규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부천시는 지난 2일 행정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시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1년6개월 이상 근무하고 고교졸업 학력 이상인 시 직원들을 국립 서울산업대학교에 위탁, 교육시킨다는 내용의 ‘관·학협력 합의서’를 이 대학교와 체결했다. 시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행정학과 1개 학과를 개설, 무시험 전형을 통해 정원 40명을 선발, 대학 4년 정규 교육과정에 입학시키기로 했다.

강의는 시청 중회의실에서 실시되며, 매주 3~4일 오후 6시30분부터 10시까지 이뤄진다.

음성, 절약실천 ‘자린고비賞’ 제정

〈충북〉 자린고비의 본고장인 충북 음성군이 어려워 진 국가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군 자체적으로 ‘자린고비 상’을 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군은 조선 영조때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중삼마을에 살면서 강한 절약정신으로 평생 자선사업을 실천해 가



충남도청 임시 김장시장 개장

경제살리기운동의 하나로 ‘차안타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충남도는 지난 1일 비어 있는 도청주차장을 활용한 일뜰 김장시장을 열었다. 이날 열린 김장시장에서는 도내에서 생산된 무와 배추·양념류 등 김장재료가 값싼 가격에 판매됐다.

보해 준다. 신고센터는 서울 등 전국 6개 지방국도관리청과 19개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설치되며 신고용 엽서나 전화(504-9075)·팩스·PC통신·민원서류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과학관서 과학영화 상영

국립중앙과학관은 12월 한달동안 대덕연구단지내 과학관에서 오전 1시와 오후 2시 하루 두차례씩 과학영화를 상영한다.

날짜별 상영일정은 다음과 같다. △9~14일=즐거운 과학여행 △16~21일=사고를 피하는 안전운전, 물의 오염,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 △23~30일=우주탐색, 위험에 처한 자원, 생물의 분류법. 문의 042-861-2542

인터넷 홈페이지 증설

공보처는 현재 운영 중인 인터넷 홈페이지 ‘열린정부 알림마당’에 내달부터 외환위기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 등을 담은 ‘현안이슈’와 ‘국정자료실’ 코너를 신설한다.

‘현안이슈’란은 새롭게 발표되는 정부의 주요 시책과 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나 대책을 밝히며, ‘국정자료실’에는 주간 국정신문을 비롯 일일 주요외신, 세계 주요 언론개황 등의 자료를 소개한다. ‘열린정부 알림마당’의 자료는

자벼슬(당시 정 3품 통정대부 해당)을 받았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는 조록의 정신을 실천하는 군민을 선정, ‘자린고비 상’을 수여키로 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자린고비 상’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근검절약을 실천, 저축을 생활화하며 지역사회에서 봉사와 자선사업을 실천하는 주민에게 주어진다.

군은 내년부터 9개 읍·면장으로부터 2명씩 대상자를 추천받아 심사를 거쳐 매년 저축의 날에 ‘자린고비 대상’ 1명과 금·은·동상 각 1명 등을 선정, 군수 명의의 상패와 함께 상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나주에 마한역사 문화단지 조성

〈전남〉 전남 나주지역에 마한역사 문화단지와 종합관광휴양지가 조성된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반남·다시면 일대 2만5천여평에 마한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박물관과 마한시대 생활상 전시관을 오는 2007년까지 4천9백억 원을 투입해 건립할 계획이다.

3단계에 걸쳐 완공될 마한역사 문화단지는 마한시대 고분군으로 유명한 반남면 일대에 마한 역사촌이 조성되며 전남지역 전통공예품을 생산하게 될 공예촌도 조성된다. 또한 선사시대 이후 시대별 묘제의 변천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묘제촌 조성과 함께 나주읍성의 모형을 재현할 계획이다.

장애인 복지회관 내년 1월 착공

제주도는 지난 3일 날로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방화시대의 복지수준을 한차원 높이기 위해 도내 1만여 장애인을 위한 대규모 복지회관을 신설키로 하고, 내년 1월부터 착공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내 중심가 도유지 1천3백73평에 지상 3층, 지하 2층 규모로 들어서는 장애인 복지회관은 물리치료실·대중목욕시설 등 각종 복지시설이 갖추어진다.

도 관계자는 “내년 12월 복지회관이 완공되면 장애인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 수준이 크게 향상돼 장애인의 소외감 해소는 물론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채널 K-TV

(케이블TV 채널14)

◆오늘의 국정(8일, 오후 5시30분)

△외국의 경제난 국복사례 △도로교 통법개정안

◆출발 전국을 향하여

(10일, 오후 6시10분)

△충남 연기군-전국 단무지 생산 60%를 차지하는 연기군의 단무지 생산현장 등을 찾는다

◆숨은일꾼을 찾아서(11일, 오후 6시10분)

△농촌지도사의 이웃사랑-전부학씨 (창원시 농촌지도소)

◆우리가락 우리춤(12일, 오후 8시30분)

△가곡:이삭대엽 △노래곡:신사랑가 (노래 유정현, 이수철) △국악사랑방:국악기는 내 친구-피리 소개와 피리 산조 감상 △명인탐방:강선영(Ⅱ)

△공연실황:자바민요 감상(연주 서울 새울 가야금 삼중주단) △실내악곡: 신강강술래(연주 천지율)

◆세미나 중계실(8일, 오후 2시30분)

△정보화시대의 남북한 문화통합-김정기(외국어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용호(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Andrew Nathan(미국 컬럼비아대 정치학과 교수), Stefan Brauburger(독일 ZDF 현대사분과 기획위원)

참석

인터넷 웹서비스 뿐만 아니라 공중통신망을 통한 PC통신 서비스와 서울역·김포공항·정부청사 등에 설치돼 있는 무인정보단말기(Kiosk)를 통해서도 24시간 개방된다. ‘열린정부 알림마당’의 웹 서비스 주소는 <http://allim.moi.go.kr>이며, PC통신에서는 GO ALLIM으로 접속할 수 있다.

선거자료 전시실 운영

중앙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들의 올바른 선거관 확립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선거연수원(서울 종로구 인의동 소재)에서 ‘선거자료 전시실’을 운영한다.

이번 전시실에는 △건국이래의 각종 선거 투표용지 및 선전벽보 △제헌국회의원선거 투표 장면 △불법선거운동 현장 등 희귀사진 △목재 투표함 등 각종 선거관련 자료와 용품 등이 한자리에 선보이게 된다.

이와 함께 초·중·고등학생 등이 실제 투표과정을 실연할 수 있도록 모의투표소를 설치, 선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미래의 유권자인 학생들이 선거의 중요성을 깨달아 바른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관람은 선거일까지는 휴일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선거후는 평일에만 운영한다. 문의 764-0213, 765-2393